

# 국민연금 2054년 바닥...“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질듯”

## 국회예산처 전망...장래인구 추계 최신 자료 반영 “국민연금 개편 서둘러야...정부 지원 논의도 함께”

국민연금이 2054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

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치보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진 데 대해 재정전망에 사용된 변수가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최신 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전망에 사용했다.

또 정부가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및 기대수익률을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용해 전망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54년 적립기금이 163조9000억원 적자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개혁에 따른 정부 재정 변화 전망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은 쉽지 않은 숙제다.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정부나 국회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대안만 제시한 채 마무리됐다. 특위가 제시한 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9%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2028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최저임금 동결론’ 확산

## 수출 급감에 고용 ‘빨간불’ 세계 “현상유지도 힘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매년 대립해온 경제계와 노동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압축을 만난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대기업은 올해 경제상황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고 호소한다. 1997년 IMF 이후 최악의 불황을 예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며 동결 혹은 올해 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한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경제분석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올해 경우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가 있어 경제가 위축되고, 여파가 언제까지 감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지금의 경제상황과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결정을 해

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고용정책팀장 역시 “어려운 국가경제와 자영업자 생계를 고려해서 최소한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인상한 7530원이, 2019년에는 10.9% 상승한 8350원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자 부작용도 속출했다.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꺼리고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급격한 인상의 후유증이 나타났다. 여기에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치상황까지 겹치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보다 2.87% 상승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임금인상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고용 위축과 인력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들이 고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서열 2위 현대자동차의 경우 해외 판매량이 크게 줄어 국내 제조업 전반에 그 충격과파가 연쇄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배후연관 기반산업도 고전 중이고, 항공·물류 업계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위기다. 한 수출대기업 관계자는 “단순히 노사간 문제로 볼게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대위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산다. 기업이 죽으면 결국 고용도 없고 실업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감안하면 근로자측 위원들도 올해 인상분 인상을 요구하긴 힘들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만큼은 노동계가 양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대형마트 1+1 끼워넣기 판매 ‘재포장’만 안하면 가능하다

## 환경부 “재포장만 금지...가격할인 규제 아냐”



대형마트에서 흔한 ‘1+1’ 끼워넣기 할인 판매는 이제 불법이 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서 4000원 정가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500원에 할인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는 오해가 일파만파 퍼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묶음

할인은 앞으로도 가능하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3500원에 판매할 수는 있지만, 할인 판매를 위해 비닐로 재포장하는 것만 묶음 금지된다.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제품을 포장하던 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제품으로는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는 물론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일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업계 관계 회의에서 ‘포장재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정안이 금지하는 재포장의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1+1’ ‘2+1’ 등과 같이 가격 할인 판매를 할 때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가 재포장 사례로 제시됐다. 사은품 역시 기존의 제품과 함께 또 한 번 포장돼 판매되면 재포장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묶음할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불거졌다. ‘제품 2개를 묶어서 정가에 판매할 수는 있어도 2개를 묶어서 할인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잘못된 소식이 퍼졌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이러한 묶음 할인 행사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가져가기 쉽게 날개 제품 여러개를 추가로 ‘재포장’한 묶음 포장을 볼 수 없을 뿐이다. 편의점처럼 날개 제품을 쌓아두고 ‘1+1 할인’ 문구를 써붙여 판매하는 방식은 여전히 가능한 얘기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1+1 등 끼워넣기를 위한 불법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나섰다.

# 전남 농특산물, 대구에서 직거래 장터 연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 신세계백화점 직거래장터에 이어 오는 2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도 ‘영호남 상생 직거래장터’를 진행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터 오픈한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난 5월 전남도와

신세계백화점이 맺은 전남 농특산물 판로확대 협약에 따라 열리고 있으며 전남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행사기간에는 전남 시군별 대표 농특산물 100여 품목을 시중가격 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여수 돌산갯김치와 순천 매실, 담양 요거트, 곡성 멜론, 구례 초당옥수수, 보성 녹용진액, 화순떡, 강진 버섯, 영광 꿀배, 진도 울금 등 지역특산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강종철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 나랏빛으로 실업급여 채운다 매달 1조 원씩 소진 ‘바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에 육박하며 고용보험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금 예산에 5조원 정도를 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중 약 3조원은 나랏빛인 국채로 충당하기로 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 기금을 유지·운영하게 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빚을 내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기금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1일 정부가 이달 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액은 4조6740억원에 해당한다.

## 기금수입 전망 동일한데 실업급여 사업비 3.4조 ↑ 계속되는 ‘핑크’ 우려 노동계 “보험료 인상 동의”

대부분인 3조10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금(예수금)’으로 계획됐다. 이는 고용보험이 공자기금에서 약 3조원을 빌려 가겠다는 뜻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국고채 발행 자금, 연기금 등의 정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다. 이번 3차 추경안 소요재원을 감당하기 위해 23조753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곳이 바로 이 기금이다. 나머지 1조5740억원은 다른 재정사업에서 떼어 낸 일반회계 전입금 3700억원과 매년 보험료 수입을 남겨 만든 적립금(여유자금) 인출분 13조204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같은 기금 계획 변경의 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고용안정·실직자생계보장 등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금수입 13.5조 똑같은데...실업급여 사업비 3.4조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 전망은 13조 5246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함없다. 그러나 기금 사업비는 2차 추경을 반영한 현 계획(16조3866억원) 대비 4조 6584억원 늘어난 21조3450억원으로 급증했다. 늘어난 사업비 대부분은 실업급여(3조3938억원)가 차지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9802억원) △고용충출장려금(2505억원) △내일배움카드 등 실업자맞춤근로능력개발지원(1567억원) 순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 지출이 폭증하고 있는 영향이다. ◇계속되는 기금 핑크 ‘우려’...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번 기금 계획 변경은 코로나19라는 명분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사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우려는 하루 이를 문제가 아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상하한액 인상 등 고용안정망 강화 정책 영향이다.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활발해지고 있는 영향도 있다. 기금 재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등 기금수입 제도 방안이 근본 해결책이겠지만 지금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서 기금 현실화 방안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노동계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대신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월평균 급여 1.6% 수준인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사회연대를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고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